

##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

전 성 훈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한 6자 수석대표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남으로써 앞으로 6자회담의 장래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검증의정서의 핵심은 시료채취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이었지만, 북한은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물론 신고한 시설에서의 시료채취 조차 완강하게 거부했다. 북한과의 검증협상을 주도했던 힐 차관보는 시료채취에 구두로 합의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문서화된 약속도 위반하기 일쑤인 북한과의 구두합의가 그대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한 것은 힐 차관보의 커다란 실책이다.

물론 현 사태의 책임을 힐 차관보 개인에게 물을 수만은 없다. 2007년 2·13 합의가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업적 만들기' 차원에서 원칙을 저버려가며 만들어졌고, 2008년 4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시리아 핵확산 문제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2·13 합의 당시 한·미의 당국자들은 원상복구 하는데 5년 걸리는 불능화이고 핵무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북구에 1년도 안 걸리는 어정쩡한 불능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핵무기 문제는 6자회담에서 입에 담지도 못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월 24일 재처리시설을 일주일 안에 재가동하겠다고 IAEA에 통보했지만, 어느 누구도 불능화 된 시설을 그렇게 빨리 재가동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

오늘과 같은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 역시 임기 말에 업적 만들기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무리하게 시도함으로써 북한에게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왜곡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반하며 파키스탄과 HEU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냈다. 미국의 이런 무책임한 처사가 남한 사회에 근거 없는 허위 안보감을 불어넣은 것도 사실이다. 클린턴의 잘못된 북핵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출범한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한·미 동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6자회담에서 사실상의 리더로서 뒷심을 유지해야 할 미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면서 당초 기대했던 '5 對 1'의 구도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해서 북한정권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자신의 진정한 업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검증협상의 실패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었다. 첫째, 한·미 협상팀이 북한의 집요하고 일관된 핵전략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을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기 보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 북한의 전략을 과소평가했다. 북핵 협상의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한·미 양국 국민들로 하여금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유발한 것도 문제였다. 적어도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전략을 오판하고 외교협상의 철칙인 신중함을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양국의 협상팀이 과거 북핵협상의 사례와 경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고, 용어 하나하나가 갖

는 역사적 의미에 무지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포함해서 강력한 사찰을 실시하려면 ‘시설방문’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잘못된 합의이다. 북한은 이미 1992년 11월 당시 최우진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방문’과 ‘사찰’을 구분함으로써 IAEA 특별사찰을 거부한 바 있다. 핵통제공동위의 당사자였던 한국 외교통상부가 ‘시설방문’이라는 잘못된 북·미 합의를 막지 못한 것은 외교적 실책이며, 미국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서 해프닝이 빚어졌다. 한·미 당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국제사회의 전문가 집단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본다. 한·미 현안인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북핵 폐기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 국방부 관리들의 견해는 다르다.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2005년 이전부터 핵을 갖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북한 핵은 전작권 환수를 미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수사야 어찌되었던, 미군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검증협상 결렬을 계기로, 대한민국 군은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